



여의도포커스 인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장

## “재생에너지 ‘생산 거점’ 전남 전북의 산업 기반과 연결돼야”

더불어민주당 중진이자 전북도지사 경선을 준비 중인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완주·전주 통합에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전남광주 등의 광역행정통합 논의를 들며 “이런 흐름 속에 전북만 머뭇거리다보면 발전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며 “군민 반대가 큰 현실을 알면서도 전북 전체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책임 있는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장 안 의원은 전남의 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해 “전남의 해상풍력과 태양광 잠재력은 전북의 에너지 산업 기반과 함께 연결될 때 비로소 국가 전략으로 완성될 수 있다”며 “전남이 생산의 거점이라면, 전북은 이를 활용한 산업과 기술 확장의 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남과 전북을 하나의 재생에너지 권역으로 바라본다면, 이 지역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할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완주군과 전주시 통합에 대한 결단 배경은.  
△완주·전주 통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과제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북’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전북이 지금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기 때문이다.  
이제 전남·광주·충남·대전 등은 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관련 특별법도 조만간 통과가 예상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전북만 머뭇거리다보면 발전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 저는 행정통합 자체는 하나의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지만, 통합의 완성은 어디까지나 완주군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군민 반대가 큰 현실을 알

### 광역 행정통합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위한 선택 ‘완주·전주 통합선언’도 위기의식에서 나온 결단 반도체클러스터 분산 배치...기업 전략적 판단 영역

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전북 전체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책임 있는 결단이었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성운 민주당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에 함께한 의미는.  
△이번 기자회견은 완주·전주 통합의 찬반을 떠나, 전북 발전이라는 더 큰 과제 앞에서 정치권이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자리였다. 두 분이 함께한 것은 이 사안을 특정 지역이 아닌 개인의 정치적 선택으로 보지 말고, 전북 전체의 미래 문제로 끌어올리자는 공감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전북은 지금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정치권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앞세우기보다, 전북의 미래를 위해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번 기자회견은 통합 방식에 대한 논쟁과는 별개로, 전북이 더 큰 자원과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정치권이 함께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자리였다.

- ‘전남·광주특별법’을 위한 특별법이 당론으로 발의된 데 대한 견해는.  
△전남·광주특별법 설치 특별법이 당론으로 발의된 것은 국가 균형발전이 선언이 아니라, 실제 구조 개편 단계로 들어섰다는 신호라고 보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 단위로 행정·산업·재정 역량을 묶는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부와 여당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

다만 이 흐름이 특정 지역만의 기회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전북 역시 같은 국가 전략 속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지역 소외를 낳을 수 있다. 저는 전남·광주·충남·대전 통합 논의와 함께, 같은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원이 전북에도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형평성과 준비다.

- 5극 중심 설계가 전북특별자치도 입장에서 억차별이라며 재정 인센티브 보장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5극 중심 국가발전 설계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구조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오히려 억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할 수 없다. 전북은 이미 특별자치도라는 제도적 실험을 감내해 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정책적 인센티브는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5극 중심으로 대규모 지원이 집중된다면 전북은 구조적으로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재정 인센티브와 정책 우선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전북이 또 다시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반도체 클러스터 분산 배치는 정치의 문제인가 아니라 기업 생존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언급한 배경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분산 배치는 지역 간 이해나 정치적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생존과 직결된 전략적 판단의 영역이다. 반도체 산업은 공급망 안정성, 인재 확보, 전력과 용수, 리스크 분산이 핵심 경쟁력인데, 모든 기능을 한 지역에 집중하는 방식은 오히려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최근 국제 정세와 기술 패권 경쟁을 보면, 기업들은 단일 거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복수의 안정적인 생산·연구 거점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분산 배치는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다.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서 전남의 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남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그 자체로도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지만, 저는 이 문제를 전남만의 과제로 보지 않는다. 전남의 해상풍력과 태양광 잠재력은 전북의 에너지 산업 기반과 함께 연결될 때 비로소 국가 전략으로 완성될 수 있다. 전남이 생산의 거점이라면, 전북은 이를 활용한 산업과 기술 확장의 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남과 전북을 하나의 재생에너지 권역으로 바라본다면, 이 지역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할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특히 두 지역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산업 활용을 결합해 RE100을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전남과 전북이 함께 성장하는 재생에너지 전략을 제도와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

- KAIST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의 AI(인공지능) 공공의료 연구모형을 전북 남원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  
△AI 공공의료 연구모형을 전북 남원에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은, 첨단 기술이 수도권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 주민의 삶을 직접 바꾸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KAIST는 이미 AI·의료 융합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고, 남원은 공공의료 인프라와 고령화·의료 접근성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지역이다. 저는 이 두 조건이 결합할 때,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현장에서 검증되는 세계 최초의 AI 공공의료 모형을 만들 수 있다고 봤다. 이 모형을 의료 인력 부족 지역에서도 진단·예방·관리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전북이 AI 기반 공공의료라는 새로운 국가 전략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남원을 실험 대상이 아니라, 미래 공공의료 혁신의 출발점으로 만들고 싶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에 출마하시라.  
△저의 전북도지사 출마는 개인의 정치적 선택이라기보다, 전북의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다. 지금 전북은 국가 균형발전 전략, 산업 구조 재편,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지만, 그 흐름의 중심에서 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는 국회의원으로 서 그 구조적 한계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다. 이제는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북의 미래 전략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할 책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출마는 자리를 얻기 위한 도전이 아니라, 전북이 다시 국가 발전의 축으로 설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기 위한 선택이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전북의 기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이 저를 이 자리로 이끌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안 의원이 지난해 9월 22일 전북 전주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완주·전주 통합 찬반 갈등해소의 시간’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안호영 의원실



지난해 8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안호영 의원실



안호영 의원이 지난달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핵심 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안호영 의원실